

『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』 주요 내용 요약

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디지털산업과 규제에 대한 연속성 있는 데이터 축적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매년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.

『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』는 산업 및 규제 현황을 반영한 다음의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〈1장〉 인터넷산업 현황

- 인터넷산업 분류별 매출·종사자 규모 연간 데이터 수집 및 동향 분석

〈2장〉 2024 인터넷산업 전문가 인식조사

- 10인의 전문가(학자) 인터뷰를 바탕으로 산업의 현재 진단 및 미래 방향 제시

〈3장〉 2024 인터넷산업 주요 규제 동향

- 2024년 핵심적으로 논의된 규제 이슈를 선정하여 흐름 정리

〈4장〉 제21대 국회 인터넷산업규제 입법 경향 분석

- 21대 국회 인터넷산업규제 발의안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정리 및 시사점 도출

아래의 내용은 『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』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, 시사점 및 제언은 입법 경향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도출되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『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』 본문은 (사)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(<http://kinternet.org/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파일 위치: 디지털경제연구원 > 규제백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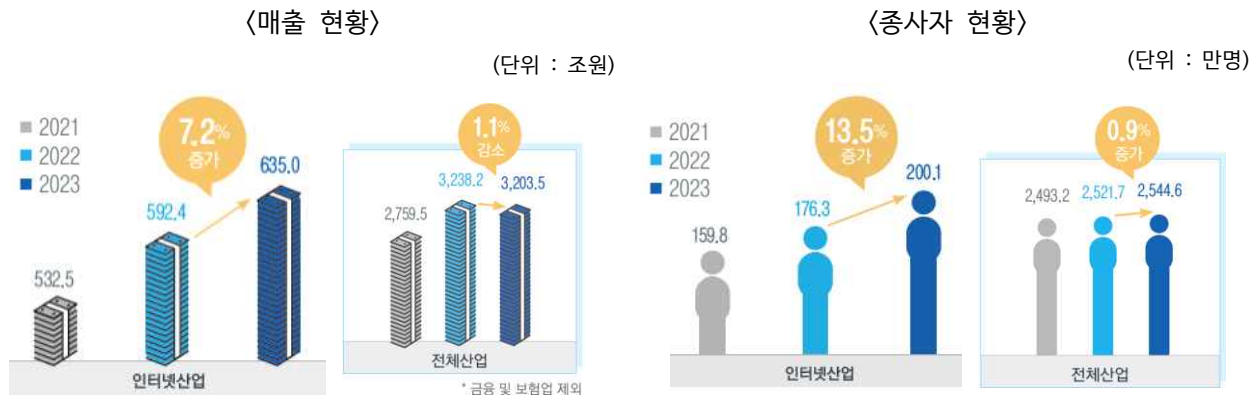
[1] 인터넷산업의 성장과 주목할만한 분야

□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인터넷산업

- (매출 성장)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.2% 증가한 635.0조 원
 - 2023년 전체 산업(금융보험업 제외)의 매출액은 3,203.5조 원으로 전년 대비 1.1% 감소
 -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은 각각 2.5%, 11.5% 감소,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각각 1.4%, 5.8% 증가하였으나, 인터넷 산업의 성장률(+7.2%)에는 미치지 못함
- (고용 창출)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의 종사자는 전년 대비 13.5% 증가한 200.1만 명
 - 전체 산업의 종사자 수는 2022년 2,521.7만 명에서 2023년 2,544.6만 명으로 0.9% 증가

- 업종별로는 제조업 2.3% 감소, 도소매업과 건설업도 각각 0.1%, 1.7% 감소하며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며, 금융보험업은 0.3% 소폭 증가

〈그림 1〉 인터넷산업과 전체산업의 매출 및 종사자 현황(2021~2023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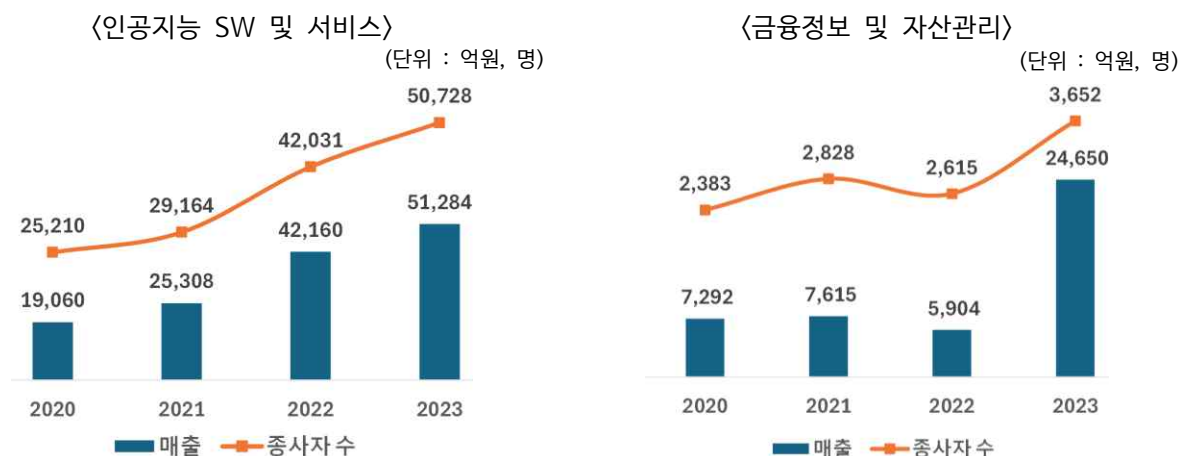


*출처 : 통계청 「기업활동조사」, 「전국사업체조사」

□ 혁신 기술 분야의 급성장 주목 필요

- (클라우드 서비스업) 전년 대비 매출액 22.4% 증가, 종사자 수 30.9% 증가
 - AI 및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고, 기업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음
- (인공지능 SW 및 서비스) 전년 대비 매출액 21.6% 증가, 종사자 수 20.7% 증가
 - 인공지능 SW 및 서비스 산업은 생성형 AI의 확산과 클라우드 인프라 발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이 확대되며 성장했으며, 정부의 정책 지원과 민간의 투자 확대도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침
- (금융정보 및 자산관리) 전년 대비 매출액 317.5% 증가, 종사자 수 39.7% 증가
 - 디지털 बैं킹 수요가 확대되고,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고객의 디지털 선호도가 강화되는 등 비대면 금융 플랫폼 수요가 증가하였으며,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원까지 겹쳐져 핀테크 기업들이 더 많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

〈그림 2〉 업종별 매출 및 종사자 현황(2020~2023년)



*출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「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」, 한국핀테크지원센터 「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」 가공

[2] 21대 국회의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에서 드러난 경향

□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, 입법 반영률과 실효성 모두 저조

- **(발의 동향)** 21대 국회 임기 4년간 인터넷산업규제 관련 법률안은 총 492건
 - 492건 중 개정안은 432건(88%), 제정안은 60건(12%)이며, 주요 법률로는 정보통신망법(83건), 전기통신사업법(63건), 전자상거래법(38건), 개인정보 보호법(37건), 온라인플랫폼법(안)(22건) 등의 순
- **(법률 반영)** 492건의 법안 중 법률에 반영된 건은 약 19%(95건)로 21대 국회 전체 법안의 법률 반영 수준(31%)보다 현저히 낮음

〈그림 3〉 인터넷산업규제 법안과 21대 국회 전체 법안의 처리 비율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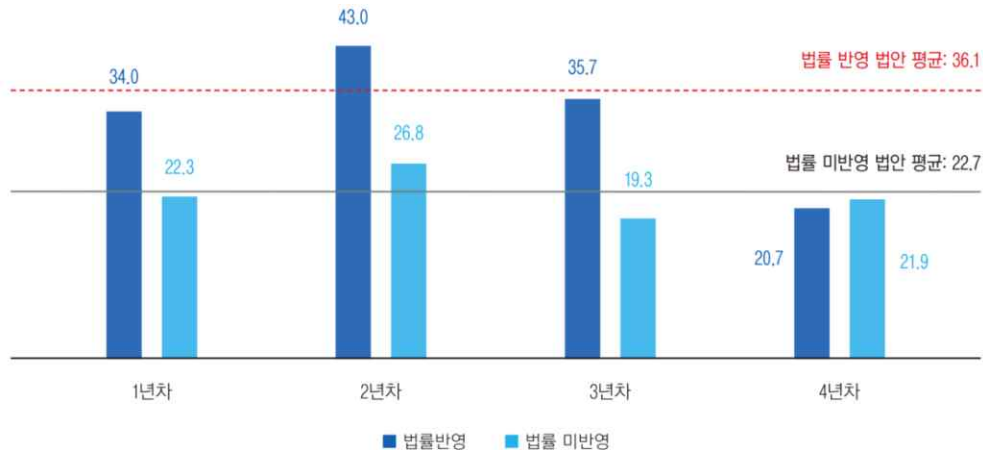
- **(평가 결과)** 21대 국회 전체 임기에 걸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25.3점으로 중하위 수준이며, 특히 임기 후반부에 더 저조한 성적을 보임

〈그림 4〉 21대 국회 입법평가 결과와 연차별 점수 변화



- (법률 반영과 평가 점수의 관계) 법률에 반영된 법안(평균 36.1점)과 미반영 법안(평균 22.7점) 사이에는 13.4점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어, 법안의 질적 수준과 법률 반영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함
- 연차별 발의된 법안의 경향을 비교하면,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극히 적은 4년차를 제외한 모든 시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확인함

〈그림 5〉 연차별 법률 반영 법안과 미반영 법안 점수 차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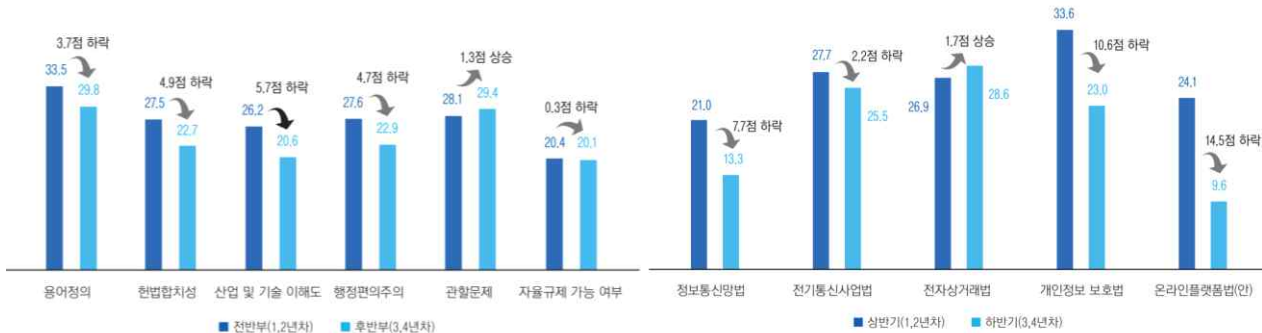


- (시간 경과에 따른 법안 품질 변화) 전반부(1, 2년차)에 비해 후반부(3, 4년차)에 대부분 평가 지표 점수의 하락이 확인되어, 후반부로 갈수록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낮은 법안이 발의되는 경향을 확인함
- 평가지표 대부분의 항목이 크게 하락하였으며, 특히 ‘산업 및 기술 이해도’ 항목이 크게 낮아져 산업 현실과 법안 내용 사이의 괴리가 심화됨
- 주요 법률 대부분 후반부에 발의된 법안의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으며, 특히 온라인플랫폼법(안) 후반부 발의안에서 큰 폭의 점수 하락을 보임

〈그림 6〉 평가지표 대분류 및 주요 법률 임기 전반부/후반부 점수 변화

〈대분류 지표별 점수 변화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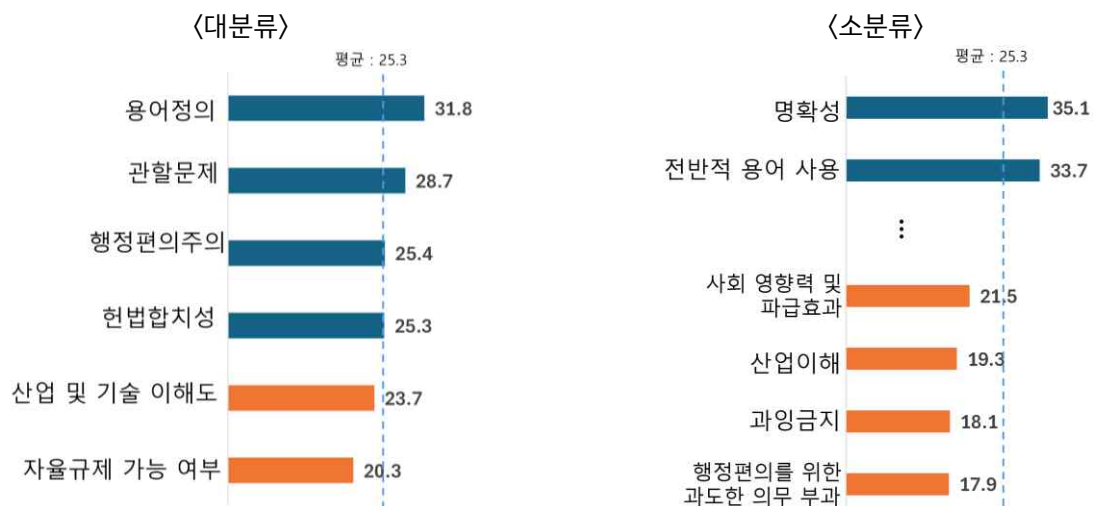
〈주요 법률별 점수 변화〉



□ 입법안 전반에 산업 이해 부족, 자율규제 외면, 행정편의 중심, 규제 균형 미흡 문제가 두드러짐

- (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) 대분류 ‘산업 및 기술 이해도’ 항목 평균은 23.7점
 - 소분류 ‘산업이해’ 항목 19.3점, ‘사회 영향력 및 파급효과’ 항목 21.5점 등
- (자율규제 고려 미흡) 대분류 ‘자율규제 가능 여부’ 항목 평균은 20.3점으로 최하위
- (행정편의주의적 접근) 소분류 ‘행정편의를 위한 과도한 의무 부과’ 항목 평균은 17.9점
- (균형성 부족) 소분류 ‘과잉금지’ 항목 평균은 18.1점

〈그림 7〉 지표별 인터넷산업규제 평가 결과



□ 주요 법안 중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(안)과 정보통신망법의 평가가 낮음

- 온라인플랫폼법(안) 평균 15.5점으로 주요 5개 법률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, 정보통신망법도 17.5점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평가
 - 특히 ‘체계정당성’(8.1점), ‘과잉금지’(8.7점), ‘산업이해’(9.6점), ‘자율규제 관련현황 반영’(9.8점) 등 핵심 항목에서 10점 미만의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음
 - 법률 반영률의 경우 온라인플랫폼법(안)은 단 한 건도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으며, 정보통신망법도 10.8%로 낮은 반영률을 기록함

〈표 1〉 주요 5개 법률안 평가 결과 및 법률 반영 현황

법률명	법안 수(개)	평균점수(점)	반영 법안 수(개)	반영률(%)
개인정보 보호법	37	29.0	14	37.8
전자상거래법	38	27.5	7	18.4
전기통신사업법	63	26.9	11	17.5
정보통신망법	83	17.5	9	10.8
온라인플랫폼법(안)	22	15.5	0	0.0

[3] 인터넷산업과 규제 현황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제언

- 플랫폼 산업은 철학 없이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규제와 정부의 권한 중심 접근으로 위축
 - "플랫폼에 대한 철학과 목표가 없다 보니 규제 수단 설정에 혼란이 온다. 주체와 방향 없이 표류하는 것이다." (전문가A)
 - "현 시점 플랫폼 관련 규제는 플랫폼이 나쁘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졌다. 이러한 규제는 당연히 업계를 크게 위축시킨다." (전문가I)
 - "한쪽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그 반대편에서 산업 진흥을 위해 수위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." (전문가G)
 - "기존 제조 산업 중심으로 돌아가던 규제 기관이 온라인 산업을 새로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고, 플랫폼이 새로운 타겟이 되었다." (전문가I)
- 또한, 내수시장에 갇힌 채 글로벌 확장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 한계에 직면
 - "성장과 진흥에 대한 언급 없이 폐해에만 집중하는 규제 환경에서 토종 빅테크 기업은 나올 수 없다." (전문가D)
 - "플랫폼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위축효과를 가져와 창의적 아이템을 실제로 구현하기 어렵게 되었다." (전문가J)
 - "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지만, 현실은 국내시장에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." (전문가F)
 - "까다로운 한국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고유의 모델을 만들면서 성장한 방식이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에 한계를 가져왔다." (전문가H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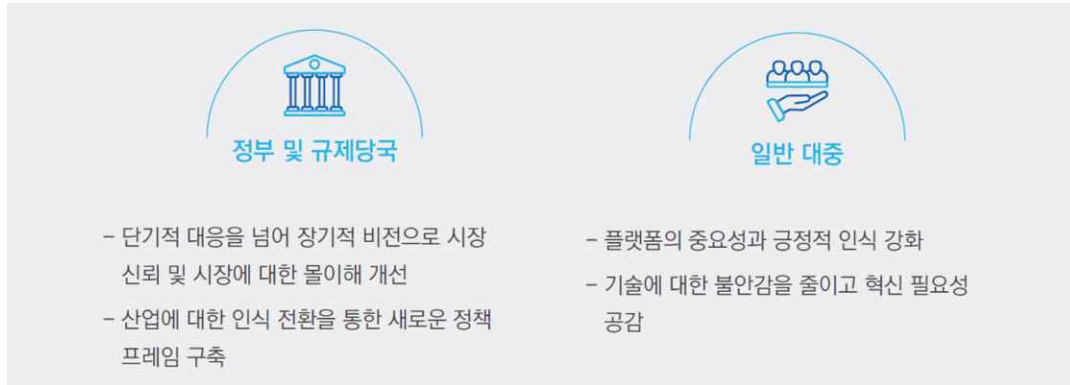
〈그림 8〉 전문가가 진단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현 상황



□ **규제 완화와 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응을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 잠재력 현실화 노력이 요구됨**

-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 비전으로 시장 신뢰 및 시장에 대한 몰이해 개선
-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 구축
- 플랫폼의 중요성과 긍정적 인식 강화
- 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혁신 필요성 공감

〈그림 9〉 전문가들이 제안한 지속가능한 플랫폼 성장을 위한 조건



[4] 시사점

□ **혁신 유도를 위한 입법 전문성 강화와 규제 패러다임 전환**

- **(플랫폼 인식의 균형적 전환)** 온라인플랫폼법(안)이 가장 낮은 평가(15.5점)를 받고 법률 반영률이 0%인 점은 기술의 위험성만 강조하는 현재의 접근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, 플랫폼의 사회·경제적 기여와 역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확산이 필요함
- **(규제기관의 디지털 역량 제고)** 전문가들이 지적한 "이해와 철학이 없는 플랫폼 산업 규제"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기관의 산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과 디지털 산업에 맞는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
- **(다양한 규제 방식 고려)** 정부 주도의 일률적·사전적 규제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, 자율규제 가능 여부가 가장 낮은 평가(20.3 점)를 받은 현실에서 산업계 자율규제, 공동규제 등 다양한 규제 방식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업 혁신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
- **(입법 과정의 산업 전문성 강화)** 입법평가 결과 산업 이해도(19.3점)가 낮은 법안이 대다수였으며, 법안의 질적 수준과 법률 반영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(13.4점 차이)이 확인된 만큼, 입법 초기 단계부터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 소통 채널 마련이 시급함

□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강화

- (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규제 설계)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13.5%에 달하는 고용 증가율과 7.2%의 매출 성장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으며, 내수시장에 갇힌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이 필요함
- (디지털 신기술 분야 집중 육성) 클라우드(매출 22.4% ↑), 인공지능(매출 21.6% ↑) 등 급성장하는 혁신 분야에 대한 규제 장벽 완화와 정책적 지원 확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함
- (산업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균형적 접근) 인터넷산업규제 법안의 자율규제 가능성(20.3점), 과잉금지(18.1점) 항목의 낮은 점수는 균형적 접근의 부재를 나타내며,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, 중소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규제 체계 설계가 중요함
- (증거 기반 정책 결정 과정 도입) 법률에 반영된 법안(36.1점)과 미반영 법안(22.7점) 간의 유의미한 점수 차이에서 보듯 규제 도입 전 충분한 데이터와 산업 분석을 통한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하며, 디지털 산업의 빠른 변화 특성을 고려한 주기적인 규제 영향 평가 체계 구축이 요구됨